

새해 맞이 파견촌(年越し派遣村) 분석

엔도 코시(遠藤公嗣) (일본 메이지대학 교수)

■ 머리말

2008년 12월 31일부터 2009년 1월 5일에 걸쳐 도쿄 중심지에 있는 히비야공원(日比谷公園)에서 「새해 맞이 파견촌(도시코시 하켄무라/年越し派遣村)」이라 불리는 활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다. 「새해 맞이 파견촌」이란, 실직해서 거주지가 없는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연시 기간에만 자원봉사와 같은 무상근로와 기부를 통하여 음식과 숙박 시설을 무료로 제공하는 활동이다.

연말연시에는 많은 사업장이 휴가기간이라 단기간의 고용기회마저 격감하고 공공기관도 휴무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긴급 생활지원도 받을 수 없는 기간이다. 이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오래 전부터 일본 전국에서 노숙자를 대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무료 봉사활동(無償活動)인 ‘밥짓기(타기다시(炊き出し))’라는 활동이 전개되었다.

히비야공원의 「새해 맞이 파견촌」 활동은 이 ‘밥짓기’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에서 큰 성과를 거둬 정당이나 중앙정부를 움직여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사회활동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운동 스타일을 제기해 성공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활동이 되었다.

이 「새해 맞이 파견촌」 활동에 대하여 신문이나 잡지 보도, 관계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 필자 자신의 견해에 입각해 설명하겠다.

■ 설립 배경

「새해 맞이 파견촌」 설립은 근로자파견법(労働者派遣法)의 근본적 개정을 요구하는 2008년 12월 4일의 집회(반빈곤운동과 연결됨)가 직접적 계기로 작용한 것이었다.

일본 사회의 빈곤화는 최근 몇 년간 사회적 주목을 받아왔는데 반빈곤운동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된 계기는 2007년 10월의 반빈곤 네트워크 결성이었다. 이는 빈곤 문제에 임하는 다양한 개인의 네트워크인데 이와 같은 네트워크는 일본에서는 처음이었다. 네트워크의 대표는 변호사인 우츠노미야 켄지(宇都宮健児)이며 사무국장은 변호사인 유아사 마코토(湯浅誠)(자립생활 서포터 센터·모아이 생활지원NPO)였다.

같은 2007년경부터 근로자파견법이 근로자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취로 빈곤(Working Poor)을 창출하고 있다는 비판이 사회적으로 강하게 대두되었다. 그 비판의 중심에는 「일일 파견근무(日雇派遣)」가 있었다. 일일고용 파견근무란 2004년부터 근로자파견법으로 합법화된 파견근로 형태 중의 하나로 일반적으로는 전일 또는 당일 아침에 휴대폰으로 파견근무 제공 용역회사(派遣元企業)에 등록된 노동자에게 파견근무할 장소를 통지하고 그 노동자는 지정된 곳으로 가서 하루만 근무한다. 전화가 오지 않으면 그날은 근무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매우 불안정한 고용이고 게다가 임금은 낮다. 2008년 봄에 정부는 비판 의견을 수렴해 근로자파견법의 개정을 약속했다.

일본변호사연합회(일변련/日弁連)는 변호사법에 입각한 변호사의 자치 조직이며 일본의 모든 변호사에게 가입의무가 있다. 2008년에는 일변련도 일일 파견근무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피력했다. 그리고 10월 3일에 일일고용 파견근무 금지 등을 포함해 근로자파견법의 근본적 개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일변련 입장에서 채택하여 공표했다.

2008년 11월 4일 정부는 근로자파견법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일일 파견근무를 전면 금지하지는 않고 사실상 지속할 수 있는 법안이었다. 게다가 그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상정이 예측되었으며 실제로 상정되었다(2월 2일 현재 심의중).

일일 파견근무 금지 등 근로자파견법의 근본적 개정을 요구하는 제반 단체는 정부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을 표시하고, 「근로자파견법의 근본적 개정을 목표로 하는 12·4집회」를 12월 4일에 히

비야공원 일각의 야외음악당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 집회의 조직상 성격은 집회의 주창자 구성에서 드러난다. 즉 주최자는 우츠노미야 켄지(宇都宮健児)나 유야사 마코토(湯浅誠) 등 변호사, NPO 관계자, 저널리스트, 작가, 대학교수 등이며, 야당인 정당이나 노동조합은 전면에 그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한 발 뒤로 물러서 있었다. 이는 4대 야당(민주당, 공산당, 사민당, 국민신당) 사이에서도, 3대 노동조합(렌고, 전노련, 전노협) 사이에도 뿌리 깊은 조직적 대립이 있어 곧바로 상호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고 또 근로자 파견법의 개정안에 대해서도 각 조직 안에서도, 각 조직 사이에서도 완전히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로자파견법의 근본적 개정에는 각 조직의 상호협력이 필수불가결했기 때문에 소위 제3자가 집회의 중심이 되는 형태를 선택해 각 조직이 협력하기 좋은 체제를 갖춘 것이다.

12월 4일 집회에서 사회자는 변호사인 나츠메 이치로(隼一郎) 씨였다. 대표인사 후 이어서 여러 개별가입 노동조합 조합원의 발언이 있었다. 이는 각각 렌고, 전노련, 전노협에 가입하거나 산하에 있는 노조와 아무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이었다. 또한 개인가입 노동조합이란 기업 조직과 상관없이 조합원을 조직하는 소수파의 노동조합이며, 일본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다수파의 기업내(기업별) 조합과 대비되는 노동조합이다. 렌고, 전노련, 전노협 각각의 인사말은 없었으나 4대 야당의 당수 혹은 당수급의 인사말이 있었다. 변호사단체는 일변련(日弁連) 이외에 노동변호단과 자유법조단이 참여했다. 변호사를 대표해서 우츠노미야 켄지가 인사했고 반빈곤 네트워크의 긴급대책으로서 12월 24일에 「새해 맞이 전화상담(年越し電話相談)」을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집회는 성공리에 끝났으며 거리 행진이 있었다.

「새해 맞이 전화상담」이 기획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상황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11월 초의 정부개정안 발표 전후에 실은 파견계약 기간의 만료 전에 파견발주처가 파견계약을 파기하는 일 등의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급격한 경기 악화 때문인데, 파견계약을 파기당한 파견근로자는 파견근무했던 기업에서 해고된다. 더 나아가 제조업에서는 파견발주 기업이 준비한 기숙사나 아파트에서 파견근로자가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파견근로자가 해고되면 거주지에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고용도 주거도 한꺼번에 잃게 되는 파견근로자가 급증하는 것이다. 이

를 표현하는 「파견 자르기(派遣切り)」¹⁾라는 신조어도 탄생했다. 이런 상황 변화와 연말연시를 염두에 두고 「새해 맞이 전화상담」이 기획된 것이다.

■ 파견촌 설립

「새해 맞이 파견촌」의 홈페이지가 개설된 것은 12월 25일이며 「파견촌」 실행위원회가 히비야 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견촌」 설립을 공표한 것은 12월 29일이었으며 이를 널리 보도한 것은 12월 30일이었다. 개촌식(開村式)은 12월 31일 오전 10시였다.

「파견촌」 설립 기간은 Hello Work(일본 공공직업안정서비스 기관)가 열리는 1월 5일까지 5박 6일이 예정됐다. 「파견촌」의 주된 목적은 3가지였다. ① 각종 상담에 대한 대응, ② 밥짓기, ③ 텐트를 사용한 간이숙박 150인분 제공이었다.

「파견촌」 활동에는 4가지 조직적 특징이 있었다. 이는 「파견촌」 실행위원회의 구성이나 개촌식(開村式)의 인사말에서도 주창되었다.

① 생활지원에 NPO와 변호사가 전면에 나선다. 「파견촌」의 명예총장은 우츠노미야 켄지이며

1) 참고로 11월 후반부터는 연일 모든 언론이 「파견 자르기」가 각지에서 발생했다는 내용과 이에 맞서는 개인가입 조합 등의 활동을 뉴스에서 보도했다. 노조활동이 ‘호의적으로’, ‘연일’, ‘모든 보도기관에서’ 보도된 것은 일본에서는 아마 몇 십 년 만의 일인 것이다. 「새해 맞이 파견촌」 설립에 직접 연결되는 아이디어를 낸 것은, 12월 4일 집회 후의 데모 행진 후 집회를 기획한 관계자와의 식사 때이다. 마이니치(毎日)신문 기사에 의하면 “집회 후 나츠메(隼一郎) 등이 <근로자의 생존권마저 위협 받는 상황인데 집회만으로 충분한가. 눈앞에 있는 한 사람을 구하는 활동이 필요하다>라며 노조에 지원을 구했고 그림으로써 파견촌이 탄생했다”(마이니치신문 1월 12일 기사). 산케이신문 기사에 의하면 “유아사(湯淺)는 ‘도쿄·이이다바시(飯田橋)의 선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결정됐다’라고 증언한다. 유아사(湯淺)의 기억에 의하면 나츠메(隼一郎) 등이 제안했다고 한다. “사람이 모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고용이나 빈곤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었다.”(산케이신문 1월 12일 기사)

총장은 유아사 마코토(湯淺)였다. 「과견촌」에 대한 기부금을 받는 은행구좌 명칭은 니즈메(霰一郎)였다. 전자의 두 사람은 반빈곤 네트워크의 대표와 사무국장이며, 니즈메(霰一郎)도 12월 4일 집회의 주최자이며 기획자이다. 또 이 세 사람의 구성원은 당초 예정된 「과견촌」 활동의 중심이 각종 상담과 식사와 숙박 시설 제공이라는 것에 부합된다. 히비야공원 안에 「과견촌」이 설치된 위치는 12월 4일의 집회 회장이었던 야외음악당 이었다.

② 노동조합이 후방지원한다. 특히 개인가입 조합의 조합원과 임원이 실행위원회를 구성해 「과견촌」의 후방지원을 맡았다. 이는 12월 4일 집회와 마찬가지로이다. 다른 것은 3대 노동조합 전국조직(렌고, 전노련, 전노협)의 각 대표가 개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과견촌」 활동의 지원을 명확하게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몇몇 기자재가 3조직 각각에 가입된 노동조합에서 제공됐을 것으로 생각된다. 3대 노동조합 전국조직의 분립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20여 년간 구체적인 사회활동에 대해 3대 노동조합 전국조직이 상호협력했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획기적인 일이었다.

③ 사회에 널리 호소한다는 것을 중시해 각종 단체나 시민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았다. 「과견촌」 홈페이지 개설이나 기자회견에서 제반 활동 보조나 거리 공연 등의 자원봉사도 많이 모여들고 기부금도 모았다. 개촌식에서 농민련(농민운동전국연합회)의 대표가 인사말을 했고 지원을 위한 상당량의 농산물이 이미 도착해 있다고 말한 것은 기획에 대한 홍보이기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④ 야당은 최후방에서 지원한다. 개촌식에서 정당은 눈에 띄지 않았다. 인사말을 했던 사람은 사민당의 국회의원 중 한 사람이고 다른 당을 포함해서 국회의원은 이 한 사람만이 참석했던 것 같다. 그러나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농민련의 농산물 지원이 개촌식 전에 도착한 것은 농민련과 관련이 깊은 공산당의 지원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사회의식의 변혁

「과견촌」 실행위원회가 예상치 못한 것은 자원봉사 지원자의 수가 많다는 점과 자발성이었다.

그리고 거액의 기부금이었다는 점이다. 즉 「파견촌」 홈페이지에 의하면 1월 4일까지 5일간 자원봉사자 등록자 수는 총 1,692명이며 기부금은 상술한 은행구좌로 입금된 것을 제외하고 파견촌에서 현금으로 받은 금액만 2,315만 엔이었다. 12일 현재 기부금 총액은 4,300만 엔을 넘어섰다. 노동조합이 명백하게 관여된 사회운동에 이렇게 많은 자원봉사자와 기부금이 모인 것은 없던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자원봉사자 등록자 수 1,692명, 즉 하루 300~400명이며 상당한 인원인데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등록하지 않고 자원봉사자로서 일한 사람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이다. 또 젊은 여성 자원봉사자도 눈에 띄었는데 그들이 이런 활동에 참여한 것은 드문 일이다.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파견촌」 자원봉사자의 다양한 경험담이 업데이트 되어 소개되고 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파견촌」 자원봉사는 글자 그대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많았다. 「파견촌」은 본래 정초 설 연휴기간 동안 급하게 기획된 활동이기 때문에 노동조합 등에 의한 동원은 효력이 없다. 또한 노동운동에도 사회운동에도 예전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참가가 많았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모여들었다.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 활동은 「파견촌」에게 있어서 필요한 요소였다. 그 이유는 입촌자가 급증해 자원봉사자도 지원 물품도 급증해 그 양이 실행위원회의 관리능력 차원을 넘어서서 실행위원회가 자원봉사자에게 일을 지시할 여유조차도 없었던 시기도 있었기 때문이다.

「파견촌」은 TV뉴스에서도 호의적으로 보도됐으며 보도 횟수도 어마어마했다. 정초 설 연휴기간에는 뉴스거리도 감소하는데 그 빈 자리를 메우듯이 매일 모든 뉴스 시간대에 「파견촌」의 동향이 보도된 것이다. 거대한 홍보였다. 뉴스 보도가 자원봉사자를 급증시켰고 이것이 또 뉴스 보도를 증폭시켰다.

■ 정당과 정책의 변화

후생노동성의 강당 개방과 이를 촉진한 사회의식 변화는 이번에는 정당과 정책의 변화를 가져

왔다.

정당에 의한 ‘파견촌’ 지지 확대는 1월 4일의 「파견촌」 입촌자 집회와 5일의 국회의원회관 내 집회(원내집회)에서 알 수 있다. 참고로 1월 4일 현재 「파견촌」 입촌자 수는 499명이며 이것이 최종 입촌자 수이다.

1월 4일의 「파견촌」 입촌자 집회에서는 12월 4일 집회에서 인사말을 했던 4대 야당의 당수·당수급 인사와 더불어 신당 다이치(新黨大地)의 유일한 국회의원인 스즈키(鈴木宗男) 의원이 인사말을 했다. 스즈키 의원은 본래 자민당의 유력 의원이었으나 알선수뢰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며 신당대지라는 정당을 결성해 2005년 총선에서 중의원 의원으로 당선됐다. 스즈키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회 결의를 제안했다. 아마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4개 정당도 찬성했다.

1월 5일의 원내 집회에서는 4대 야당과 스즈키 의원과 더불어 자민당의 오무라(大村秀章) 의원과 가타야마(片山さつき) 의원도 인사말을 했다. 두 의원의 인사말은 ‘총선을 염두에 둔 퍼포먼스’(정치 평론가 伊藤惇夫)라는 비판도 있었으나 이를 통해 「파견촌」 활동을 모든 정당이 지지한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참고로 1월 3일에 아소(麻生太郎) 총리가 “파견촌에 대한 대응에 만전을 기하라”며 가와무라(河村健夫) 관방장관에게 지시했다는 보도도 있다(지지통신 1월 3일). 스즈키 의원의 제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과 거주 확보를 요구하는 긴급결의」로서 1월 6일에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 변화와 병행해서 정책적인 변화도 있었다.

첫째로 정책 실무의 변화이다. 「파견촌」 입촌자에 대한 긴급대책으로서 촌 내에서의 생활보호 신청접수가 행정 차원에서 실시됐다. 총 240명의 입촌자가 신청했다. 신청 후 대부분이 신속히 수리됨으로써 급부 결정이 내려졌다. 이런 조처는 법률의 규정에 입각한 것이지만 기존 생활보호 신청은 행정창구에서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기에 큰 변화였다.

「파견촌」은 5일에 종료되었지만 그 전에 후생노동성과 도쿄도에 의해 도쿄 도내(都内) 4군데 시설이 12일까지 숙박할 장소가 없는 입촌자에게 숙박 시설로 제공되었다. 5일 이후 도내 4곳의 시설에서는 Hello Work가 약 4,000건의 구인규모로 취업상담을 실시해 입촌자 125명이 구직

등록을 했다. 이들은 향후 대책의 선례가 될 것이다.

12일 이후에도 갈 곳이 없는 입촌자를 대상으로 실행위원회가 도쿄 도내의 2개의 여관을 빌려 숙박과 식사를 제공하게 되었다.

둘째로 근로자파견법을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여당과 정부에서 개진되게 되었다.

1월 4일의 보도에 의하면 자민·공명 양당의 신규고용대책 프로젝트 팀은 파견용역회사가 파견발주기업으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에 상한선을 둘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현재 상황은 파견근로자 임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중개수수료이며 높은 수수료가 근로자의 임금을 깎고 있기 때문이다. 또 파견계약 종료(즉 파견자르기)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필요조건을 상향조정하거나 3개월 정도의 구직지원 의무를 「파견자르기」를 한 파견용역회사에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1월 5일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마스조에(舛添要一) 후생노동성 장관은 제조업에 대한 파견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근로자파견법을 재검토할 생각을 표명했다. 이는 민주당 등 야당이 생각하는 개정안과 거의 같은 방향인 것이다. 또 「파견촌」 입촌자에 대해서는 생활보호 적용 등으로 지원하고 일과 거주지의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표명했다. 카와무라(河村建夫) 관방장관은 기업은 내부 유보자금을 활용해 고용유지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1월 16일의 일본경제신문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15일 국회 내에서 신 고용대책 프로젝트 팀(가와사키(川崎二郎)좌장)의 회의를 열고 파견사원의 고용 중단 등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에 관한 검토 항목을 정리했다. 제조업 파견에 대해서는 파견 자체의 전면금지는 당분간 유보하는 한편 구제책이나 질이 나쁜 파견용역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를 내세웠다. 제조업 파견 규제에 대해서는 파견 중단이 된 사람을 대상으로 ① 파견용역회사가 재취업을 알선하도록 의무화한다. ② 파견용역회사가 지불하는 손해배상제도를 법제화한다. — 등의 안을 축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일치했다. 가와사키 좌장은 기자회견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봄까지 여당의 관련법 개정안을 정리한 뒤 민주당 등과 수정합의를 목표로 한다고 했다.

■ '파견촌'에 대한 비판

파견촌에 대해서는 아래 네 종류의 비판이 있다.

첫 번째 비판은 '파견촌' 입촌자는 「파견 자르기」 등을 당한 실업자보다도 노숙자가 많아서 구제할 필요가 없다. 즉 실업자는 근로의욕이 있어서 구제 대상이 될지 모르나 노숙자는 근로의욕이 없으므로 구제할 가치가 없다. 그런데 「파견촌」은 구제 대상이 아닌 사람을 구제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총무대신 정무관인 사카모토(坂本哲志) 씨가 1월 5일에 “파견촌에는 정말로 성실하게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모여 있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비판한 것도 같은 취지의 말일 것이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입촌자 중에 노숙자의 숫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 것은 사실이다. 1월 12일에 집행위원회가 공표한 바에 따르면 생활상담을 받은 입촌자 354명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파견 자르기를 당한 사람 20.6%, ② 일일 파견근로자로 일자리가 없어진 사람 16.1%, ③ 파견근로자는 아니나 불경기 때문에 실직한 사람 19.8%, ④ 예전부터 노숙했던 사람 9.3%, ⑤ 생활보호가 중단된 사람 2.5%, ⑥ 무응답 2.5%, ⑦ 미분류 21.5%(성별 : 남성 96%, 여성 2.8%, 무응답 1.1%, 연령별 : 20대 5.9%, 30대 24.6%, 40대 29.1%, 50대 이후 35.6%, ⑧ 무응답 4.8%). 이 중 ①~③이 실업자로 분류될 만한 사람이고 그 나머지는 노숙자가 많을 것이다. 생활상담을 받지 않았던 입촌자이나 입촌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중에 노숙자는 더 많았을 것이다. 입촌자의 연령이 높다는 것도 이를 시사한다.

노숙자가 많았다는 것은 자원봉사자의 소감에서도 자주 언급된다. 그러나 자원봉사자의 대부분은 그리고 기타 많은 사람들은 노숙자가 많은 것을 문제시하지 않는다. 실업자도 노숙자도 생활빈곤자이며 동등하게 지원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같은 생각에서 많은 비판이 사카모토(坂本哲志) 씨에게 집중하고 여당인 공명당의 오타(太田昭宏) 대표도 사카모토 씨를 비판해 다음날인 6일에 사카모토 씨는 발언을 철회하고 사죄를 했다.

두 번째 비판은 근로조건이 나쁜 파견근로자가 된 것도 「파견 자르기」를 당한 것도 「파견 자르기」를 당했을 때 저축이 없어서 생활이 궁핍해진 것도 그것은 본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딱히 지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비판은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자기책임론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공공연히 주장되는 일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익명 비판에서는 적지 않았던 것 같다. 그리고 이런 비판에 따르면 아무런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없다.

필자의 견해는 이런 비판이 공공연히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파견촌」 활동이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세 번째 비판은 「파견촌」 입촌자는 제멋대로이다. “입촌자는 일을 고르고 있다. 어떤 일자리든 일을 하면 될텐데.”라는 비판이다(예를 들어 텔런트인 미노 몬타(みのもんた)의 발언 1월 5일 TV 방송). Hello Work가 약 4,000건의 구인을 준비했는데 입촌자의 구직등록자 수가 125명으로 적다는 것이 알려지자 비판이 쇄도했다.

필자의 견해는 실직과 빈곤에 빠진 개인의 실제 상황을 고려해 보면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실직과 빈곤은 단순히 일자리나 돈이 없는 것뿐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 근로자의 정신적인 면에서도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 일본의 실직과 빈곤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는 역사가 짧고 이것이 이런 비판의 여지를 준 것이다.

네 번째 비판은 「파견촌」은 좌익정당이 콘트롤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공공연히 주장되지는 않았다. 앞에서 기술한 사카모토(坂本哲志) 정무관은 “(1960~70년대의)학생운동 시절의 전술과 전략이 엿보이는 것 같다.”라며 비판했었다. 이런 종류의 비판도 인터넷상의 익명 비판에서는 적지 않았던 것 같다.

좌익정당이 공산당이나 사민당을 의미한다면 공산당이나 사민당이 「파견촌」을 지지했다는 것은 사실이며 이는 감추어진 사실이 아니다. 이것이 보수파 입장에서 신경쓰였던 것은 공산당이나 사민당이 지원한 사회운동이 광범위한 사회적 지지를 얻어 매스컴에 호의적으로 보도된다는 것이 정말 오래간 만에 있는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의 견해는 공산당이나 사민당이 「파견촌」을 콘트롤한 것이 아니라 「파견촌」 활동이 공산당이나 사민당에 영향을 준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파견촌」 활동이 큰 영향력을 갖는 것이다.

또 보수파도 견해가 일치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이시하나(石原慎太郎) 도쿄 도지사는 자타

가 공인하는 보수파이지만 「파견촌」에 대해서는 1월 5일에 “후생노동성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고 있으며 결국 자원봉사자나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서 성과를 거뒀다. 정말로 정부는 중요한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다”(산케이신문 1월 6일)고 말해 「파견촌」에 호의적이다. 여기서 지자 체란 도쿄도(東京都)이며, 히비야공원의 「파견촌」 사용허가는 도쿄도가 내주었다.

■ 경영자와 기업내 조합의 당혹감

제조업 대기업의 경영자와 그 기업내 조합은 「파견촌」 활동이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았다는 점에 대해 큰 당혹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조업 대기업의 경영자로서는 경영이 악화됐을 때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을 우선적으로 줄여 정규직 고용자의 고용을 가능한 한 지킨다는 것이 기존 일본 사회에서 인정된 올바른 규칙이었다. 예를 들어 판례법인 「정리해고의 4가지 요건(整理解雇の四要件)」 중 하나는 고용조정은 비정규직 고용자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파견 자르기’는 이에 따른 결정일 뿐이다”라고 경영자는 생각한다. 그런데 개인가입 조합에서 비판과 항의를 받고 매스컴에서도 그 비판에 동조한다. 경영자는 당혹스럽다.

또 제조업 대기업은 거액의 내부유보금이 적립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이는 설비투자 등을 위한 자금이다. 현재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우위에 서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라고 경영자는 생각한다. 그러나 매스컴은 심지어 정부까지도 내부유보금을 고용 유지를 위해 활용하라고 비판하고 있어 경영자들은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제조업 대기업의 기업내 조합도 경영자와 마찬가지로 곤혹스럽다. 상기 경영자의 생각은 기업내 조합이 조직하는 정규직 근로자의 이익과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사례는 기업내 조합의 거대 산별 조직인 전기연합(電機連合)이 흔들렸다는 점이다.

1월 9일의 「노사 포럼」(일본경단련(経団連) 주최)에서 전기연합의 나카무라(中村正武) 위원장은 제조업에 대한 파견근로자 고용금지 논의에 대해 “성급한 결론을 내서는 안된다”, “전기산업

에서 파견근로자 고용을 폐지하면 국제경쟁력을 실추한다.”라고 말했다. 이 견해는 경영자의 견해와 거의 일치한다.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한 비판이 있었다. 인터넷상에서 많은 비판 여론을 볼 수 있다. 1월 26일의 마이니치신문에도 신랄하게 비판하는 투서가 게재되어 있다. 「파견자르기」에 기업내 조합은 전혀 대처하지 않는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희생을 통해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있다, 노동자 간의 상호협조는 생각하지 않는다… 등의 비판이다.

1월 29일의 전기연합 중앙위원회에서 나카무라 위원장은 산하의 조합원 모금이나 기금에서 1억 엔을 각출해 실직한 파견·용역근로자의 생활 재건이나 기능훈련을 지원할 것을 긴급 제안했다. 이 긴급 제안이 비판을 통해 급히 마련되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성급한 결론을 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견해에는 변함이 없다.

기업내 조합이 경영자와 같은 견해라는 것은 자동차 산업의 기업내 조합으로 이루어진 자동차총연합도 마찬가지이다. 1월 15일에 제76차 자동차총련 중앙위원회에서 니시하라(西原浩一郎) 회장은 “제조업 파견근로자 고용금지는 단기적으로 파견근로자의 고용상실을 확대하게 된다.”라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개진했고, 기업이 내부유보를 사용해서라도 고용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기자회견에서 “기업이 꼭 내부유보를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내부유보를 전면에 내세워 협상이 진전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라며 부정적인 생각을 피력했다.(마이니치 신문 1월 16일)

덧붙여 이야기하자면 전기연합이나 자동차총련이 가입한 렌고(連合)도 또한 ‘파견촌’ 활동에 대한 평가가 흔들리고 있다. 2008년 3월의 일인데 우츠노미야 켄지(宇都宮健児)나 유아사 마코토(湯浅誠) 등 반빈곤 네트워크가 ‘반빈곤 페스타’라는 이벤트를 기획했을 때 렌고는 참가하기로 결정했고 다카기(高木剛) 렌고 위원장도 심포지움에 참석했다. 그런데 같은 해 가을의 ‘반빈곤 페스타’ 기획에 렌고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파견촌」 활동에는 참가와 지원을 병행한다고 결정했다. 렌고 안에서는 「파견촌」 지지뿐 아니라 상술한 「파견촌」에 대한 4가지 비판도 비공식적으로 적지 않게 들을 수 있다.

■ 맺음말

「과견촌」 활동의 성과에 대한 사견을 기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①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직과 빈곤에 대해 중앙정부가 대책을 강구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으며 실제로 대책을 강구하게끔 했다. 향후 이는 선례가 된다.

② 근로자과견법을 비롯해 노동법제를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강하게 제시했다.

③ 생활보호 신청을 제한하는 창구 행정에 대해서는 이를 타파할 큰 돌파구를 마련했다.

④ 사회운동의 새로운 스타일을 제시해 성공시켰다. 새로운 스타일이란 NPO가 전면에 나서고 이를 뜻을 같이하는 노동조합과 야당이 지원하고, 더 나아가 일반시민이 지원하는 운동 스타일이다. 이 운동 스타일은 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 사회의식을 바꾸고 여당과 정부를 움직였다. 더 나아가 경영자와 기업내 조합에 영향을 줬다. 이상 4가지를 종합해 보면 「과견촌」 활동은 일본 사회를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이다. 일본 사회는 변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KLI**